

기자수첩

김우식 비서실장님 “사퇴여론이...”

노무현 대통령이 곧 차관 인사를 단행한 뒤 교육부총리, 민정수석 및 인사수석 후임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이기준 교육부총리 인사과문이 마무리 수준에 접어들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앞서 1월13일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의 사퇴과문으로 청와대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이 사임한데 대해 “국민께 사죄하는 뜻”이라며 “문책조치의 실제 잘못은 대통령”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우식 비서실장을 유임시켰다. 인사추천회의 주재자인 김우식 실장에게 포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하나 국정운영에 필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유임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우식 실장이 경제계·학계·종교계·언론계 인사들을 만나 <노심>을 전하러 애쓰고 그것이 먹혀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진보적 계열의 시민단체나 인터넷 언론은 “수석들은 실무책임자에 불과한 데도 책임을 묻고 실장은 지휘자인데도 면책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화학산업계 인사들은 과연 김우식 비서실장의 거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캠코코스(화학저널 인터넷판)는 화학공학을 전공하고도 정부의 고위직에 오른 김우식 비서실장과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의 인사과문에 대해 과연 사퇴가 필요했는지 <화학인>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여론조사를 2004년 1월 10-11일 2일에 걸쳐 실시했다.

여론조사 결과,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기준 부총리 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문에 75%가 <인사추천회의 의장으로서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 12%가 <이기준 부총리의 장남 부정입학에 개연성이 있으므로 책임져야 한다>고 답해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87%에 달했다.

<부정입학 관련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7%, <실질적인 인사권자도 아닌데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5%에 불과했다.

<김우식 비서실장이 이기준 부총리의 장남 부정입학과 관련성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문에는 67%가 <당시 연세대 화학공학과장에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연성이 있다>, 12%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져야 한다>고 답해 79%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개연성은 있으나 사퇴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다>는 10%, <학과장은 부정입학에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8%에 불과했다.

이기준 전 부총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훨씬 더 심했다.

<이기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사퇴한데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문에 92%가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이기준 전 부총리 장남의 연세대 화학공학과 부정입학 개연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문에도 <이중국적자로서 특례입학 자격이 없는데 입학한 것은 부정입학이다>가 55%, <이기준 전 부총리가 당시 학과장이던 김우식 비서실장에게 친분의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다>가 33%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이기준 전 부총리의 장남 동주(38)씨가 부친의 땅에 건물을 신축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문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한 상태에서 부친의 땅에 건물을 지은 것은 뻔뻔스러운 것이다> 25%,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도 한국에서 수익을 올리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21%, <재산상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상세히 조사해 처리해야 한다> 37%, <국적 포기과 건물 신축은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15%로

비교적 의견이 엇갈린 편이었다.

<이기준 전 부총리가 서울대 총장으로 재직할 때 LG화학 사외이사로 활동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문에는 <화학공학 전문가이나 서울대 총장으로서 사외이사 활동을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36%, <서울대 총장으로서의 직분이나 명예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자리로 있을 수 없다> 33%로 온당치 못하다는 응답이 69%를 차지했고, <화학공학 전문가로서 화학기업의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10%, <서울대 총장이라 하더라도 사외이사 활동에 대해서까지 규제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는 19%에 불과했다.

<이기준 전 부총리가 서울대 총장으로 재직할 때 과다한 판공비 지출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문에는 <국립대학교 총장으로서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사용한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67%, <한도 3000만원에 4억5100만원을 사용한 것은 좀 심했다> 24%로 91%가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이기준 부총리 및 김우식 비서실장 사퇴관련 긴급 설문조사>는 참여자수가 282명에 불과해 국민일반의 여론을 대변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학산업계의 인식을 대표했다고도 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부정적 인식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화학인들도 국민일반의 정서와 동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정부 관계자들이 충분히 참고해 행동을 취할 본보기로 삼을 가치는 있을 것이다.

<화학저널 2005/01/17>